

# 공공의 적, 북한은 섬멸되어야 한다! 한미군사훈련의 ‘언론’ 담론을 통해 본 분단체제의 이해\*

김성해\*\*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민경\*\*\*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과정

국내에서 한미군사훈련은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익숙한 풍경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공공의 적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한국사회의 이러한 집단적 인식과 태도가 자칫 ‘동의를 통한 지배’의 한 양상으로 볼 수는 없을까? 이 연구가 제기한 질문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한미군사훈련의 역사적 변화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훈련을 시작할 당시와 지금은 내용이 많이 바뀌었고 냉철하게 분석해보면 단순한 방어용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설득과 회유를 통해 부당한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언론사의 사실과 칼럼을 분석했다. 국내 언론이 이 훈련을 어떻게 규정하고, 원인으로 제시하며, 특정한 방식의 해결책과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지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동원된 담론전략을 확인했다. 한국사회가 이 훈련을 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다른 대안적 질서를 상상하지 못하는지, 또 왜 논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한반도는 일상적인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이면서 핵무기를 포함하는 군사훈련은 일부 긍정적 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위협이다. 연구자들은 이에 이 훈련이 갖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한편, 관련 대중지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 연구를 계기로 현 질서 유지를 통한 위기 심화가 아닌 평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한미군사훈련, 담론, 헤게모니, 비판적 담론분석, 국제안보질서, 통념

## I. 문제 제기: 익숙한 풍경과 낯선 질문

한반도에서는 해마다 한미군사훈련을 한다. 북한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위협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훈련은 북한의 침략 의도를 무력화하는 최고의

\* 백낙청(2006)은 현재의 상황을 단순한 적대적 대립관계가 아닌 ‘분단체제’라고 말하면서 그 특징을 “분단과 그에 따른 각종 이해관계를 자기 스스로 재생산하는 독자적 메커니즘”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 글에서는 분단체제는 분단구조 또는 분단질서 등으로 혼용해 사용한다.

\*\* 제1저자

\*\*\* 공동저자

전략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평소에 전쟁의 위협을 대비해 준비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력, 작전수행력 및 병참 지원 등에서 열악한 한국 군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군과 함께 훈련한다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밖에 효율적인 전투에 필요한 전우애와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갖는 군사적 효용은 상당하다. 그러나 낮익은 풍경으로 오히려 미국에 감사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이 훈련에 대한 상반된 관점도 있다.

쿠보노(Cui bono)는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뜻한다.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얼핏 봤을 때 직접적인 수혜자는 전쟁이 없으면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남한과 북한의 군부다. 적에 대한 공포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군대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국정원과 공안세력 등에 일정한 권한을 위임한다. 그러나 국가 간 손익계산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좀 다른 계산이 가능하다. 우선, 연합사의 훈련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 입장에서 반길 이유는 없다. 1990년 틴스퍼리트 훈련이 실시된 이후 북한은 거듭 중지를 요청했고 이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무관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연간 9,000억 원 정도를 내야 하는 한국도 그다지 이익은 아니다.<sup>1</sup>

훈련을 실시하는 시기가 주로 설 연휴나 추석을 전후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남북 화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은 이 훈련을 핑계로 이산가족회담 자체를 연기하거나 무산시킨 적이 많다. 핵을 투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B-52), 스텔스전투기(F-22)와 스텔스폭격기(B-2) 등이 총동원된 훈련 이후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훈련 영역을 서해로 확장시킴으로써 중국과도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만들었다. 방어가 목적이지만 오히려 위기를 도발한다. 미국의 손익계산서는 이와 정반대다.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훈련 때문에 북

<sup>1</sup> 미국의 첨단 무기와 정보력을 바탕으로 예산 대비 효율적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방자주화’ 프로그램이나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 등은 이 문제로 인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한이 자위수단으로 핵개발과 미사일에 매달리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북한과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압박하는 미국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강정구, 2004; 임기홍, 2016). 게다가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북아에서 미국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2002년 미국은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를 가로막았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경쟁자’로 선언했다(임동원, 2008). 북한과 체결했던 제네바 협정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김진환, 2010). 북한은 미사일 실험과 뒤이은 핵실험으로 협상 폐기에 반발했고, 미국은 높아진 안보위기 덕분에 미사일방어체제(MD)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2012년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미국은 북한의 위협과 이와 병행해서 강화되는 군사훈련을 통해 중국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무마했다. 중국을 겨냥한 군사훈련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을 앞에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당사자라면 그 대적점에는 미 국방부(펜타곤)와 군수업체가 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재정적자다. 해외주둔 미군은 그중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항목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100% 한국이 내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북한의 위협이 실제적인 것으로 인식될수록 최소한 주한미군과 태평양함대에 대한 예산삭감 압력은 줄어든다. 게다가 한국에 배치된 미군을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럼스펠드독트린 이후 주한미군 기지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방어용이 아닌 일종의 해외전진기지 역할을 한다. 그 비용의 절반 이상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박기학, 2015; 정옥식, 2015; 정태욱, 2008). 펜타곤으로서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보잉(Boeing), 레이시온(Raytheon), 제너럴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노스럽그루만(Northrop Grumman) 등 군수업체가 누리는 수익도 천문학적이다. 전쟁훈련은 첨단장비의 시험장일 뿐만 아니라 재고를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다. 전쟁이 발발해야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이 산업의 특성 때문에 실제 전쟁을 대체할 수 있는 훈련이 정기적으로 그것도 대규모로 진행된다는 것은 미국 군수업체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축복이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들이 의회에 로비자금으로 지출한 액수는 보잉 9,245만, 노스럽 9,151만, 록히드 8,090만 달러로 상상을 초월한다(유영구, 2013). 반대급부를 기

대하지 않고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을 바보는 없다. 국제사회 역시 이 게임의 ‘패배자’로 볼 수 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어떠한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도 또한 유엔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여하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도 이를 삼가야 한다”고 명시한다. 1990년 체결된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한 ‘비엔나합의문(Vienna Document 1990)’ 역시 4만 명 이상 동원되는 기동 훈련은 2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미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사전 공격과 주요 시설 점령 및 비대칭 군사력의 투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통상적인 방어 목적을 벗어난다. 또한 한미연합사에서 각 훈련에 대해 사전통고와 훈련감시 등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증거는 없다.<sup>2</sup> 게다가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공격이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되는 제51조의 ‘자위권’ 조항 역시 국제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고 있다(장신, 2007).

물론 이 훈련을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제로섬(zero-sum)이 아닌 ‘모두가 이기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으로 볼 수도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면서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포기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역시 미국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은 피하고자 한다. ‘팍스아메리카’란 말이 있는 것처럼 1945년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국가 간 이해관계는 변한다. 과거 고려 말기의 원나라나 조선 중기의 명나라처럼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동맹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놓은 네트워크 등을 통해 ‘자신을 도와야 한다’ 또는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놓았을 의혹도 있다.

한반도의 군사훈련은 분단질서의 슬픈 자화상이다. 특정한 담론에 의해 이 훈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역시 비극이다. 이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낮

<sup>2</sup> 한미군사훈련의 공격성은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바 있다. 권영길 의원은 ‘작전계획 5027-4’는 2003년 12월 말 작성되었으며 “단순히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는 방어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하여 북한이 반격을 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도 북한군의 단순 격퇴가 아니라 북한정권을 제거하고 북한 전 지역의 점령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태욱, 2008: 94).

익은 풍경을 낫설게 만들고자 했다.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안도감을 갖고, 또 윤리적으로 옳은 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신념도 작용했다. 이 연구를 통해 분단 모순을 극복하고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II. 이론적 논의: 담론과 헤게모니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국내 언론의 관심은 별로 높지 않다. 몇십 년째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풍경으로 당연한 현실로 인정한다. 훈련 덕분에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믿기도 한다. 일부 시민단체가 이 훈련에 문제를 제기하면 동맹을 훼손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비판이 밀물처럼 쏟아진다. 그러나 2017년 현재의 상황은 합리적이고 냉정한 ‘평가’의 산물과는 거리가 있다. 잠깐만 고민해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왜 이렇듯 지극히 당연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집단적인 인식과 태도의 원인은 다양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우선 전쟁을 통해 형성된 적과 아군에 대한 강력한 집단정서가 있다. 과거 조선이 일본의 침략에 원군을 보내준 명나라가 망한 후에도 은혜를 간직하고자 했던 것처럼 미국은 구세주 대접을 받는다.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법과 같은 통제기구의 영향도 부정할 수 없다. 군사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만으로 자칫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또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억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강요된 침묵도 있다.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엘리트의 성숙한 판단에 대한 국민적 지지라는 관점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원래는 당연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도록 논리적으로 설득되었고 대안을 생각하지 못한 채 군사훈련이라는 게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개연성은 없을까? 지식인이나 언론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담론을 통해 ‘공감과 동의(Heart and Mind)’가 관리된다는 의미의 ‘헤게모니(Hegemony)’는 이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개념은 강제가 아닌 동의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한 러시아와 달리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였다. 자본가의 착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능동적인 노동을 통해 이 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지적 및 도덕적 리더십’에 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설득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군대와 경찰과 같은 정치사회와 합의와 공감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를 구분했으며, 동의를 생산하는 것은 후자의 몫이라고 했다. 권력의 본질은 ‘억압’이 아닌 ‘회유’에 있다는 주장은 그 이후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노암 촘스키(Noaam Chomsky) 등으로 이어진다.

『지식의 고고학(Archaeology of Knowledge)』(1969)과 『감시와 처벌』(Discipline and Punish)』(1975) 등을 출간한 푸코는 그의 저서를 통해 누가 왜 어떤 경로를 통해 조현병 환자로 규정되며 이들이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능동적 행동을 유도하는 과정에 의학과 과학과 같은 전문지식이 적극 동원된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권력은 억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일 수 있다는 관점이 그의 작업을 통해 알려졌다. 1978년 에드워드 사이드가 발표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도 합의를 통해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연구다. 사이드는 아랍인을 묘사하고 이해하는 총체적인 의미 덩어리를 담론(discourse)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담론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사회와 미국 등이 아랍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의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시킨다고 주장한다. 중동에 대한 서방의 군사적 침략과 팔레스타인 등에 대한 억압정책이 국제사회의 승인 또는 암묵적 동의를 받는 배경에 이 담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 담론의 주요 생산자인 언론과 지배를 연결시킨 작업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허먼과 촘스키(E. Herman and N. Chomsky)가 발표한 『동의생산(Manufacturing Consent)』(1989)이란 책이 있다.

허먼과 촘스키는 미국의 언론이 공정하고 진실만 보도한다는 신화를 부정한다. 미국은 왜 명분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으며, 국민은 왜 여기에 동의했는가를 질문한다. 그들에 따르면 언론은 광고주, 애국심과

집단정서와 같은 일련의 압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전쟁 당사자인 군부 세력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언론은 이러한 제약 요인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선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을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 논리적 설득과 정서적 감동을 통해 헤게모니가 작동되는 영역은 다양하다.

미국에 대한 한국사회의 맹목에 가까운 협력과 복종은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주제다. 관련 연구로는 김성해(2008; 2013), 김종영(2015), 리영희(1991; 1999), 강정구(2004; 2005)와 이삼성(1996; 2004) 등이 있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한국사회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나 미국 유학 등을 통해 형성된 친미 엘리트가 통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과거 조선의 사대부와 유사한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지적한다.

자본과 노동 간 작동하는 권력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가령, 강명구(1994)는 정부가 내세운 ‘경제위기’ 담론이 실체적 진실이 아닌 일종의 홍보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었다는 점을 분석했다. 홍성구(2004), 김성해 등(2007)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정리해고제와 같은 노동개혁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은 배경에는 정부, 관변단체와 대기업과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된 위기 관련 담론이 있다고 주장한다. 젠더, 학벌 및 다문화 담론을 통해 ‘동의’가 생산된다는 연구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 예로, 한희정(2002)은 국내 여성 잡지에 나타난 모성담론을 분석했다. 한희정은 『여성중앙』, 『여성동아』, 『주부생활』 등에서 주로 강조하는 젠더 역할은 ‘어머니’로서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TV 교양 프로그램에 내재된 특정한 이미지와 문제화 방식을 분석한 백미숙(2015)의 연구도 젠더와 권력의 관계를 분석한 사례다. 백미숙은 ‘현모양처’라는 전통적 여성상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과 ‘탈주부화’를 문제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작동하는 권력효과에 주목한다. 그 밖에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언론의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양정혜 · 이현주(2005)와 김예란(2005)의 연구, 여성의 육체에 작용하는 생체권력을 분석한 윤태일(2004)의 작업 등도 여성이 남성의 지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담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경우다.

학계에서 많이 연구된 영역은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 ‘학벌’은 권력질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2004년 『학벌사회』란 책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김상봉은 문제의 본질을 “서울대 출신이 모든 권력의 정점을 차지하는 문제”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편견’과 ‘신화’의 재생산이라고 말한다. 매년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서울대 합격자 수를 중심으로 한 우수고등학교 서열과 SKY 대학이 아닌 절대 다수 대학생이 느끼는 일종의 열등감이 이러한 담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종영(2015)의 『지배받는 지배자』란 책 역시 미국 출신 유학파에 의한 헤게모니 장악을 분석한 경우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국내 교수진 상당수가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는 점과 이들이 미국 지도교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는 점과 미국의 주류 관점을 내재화한다는 점 등을 비판한다. 국내 지식인이 미국이 주도하는 지식질서를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권력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은 김성해(2106)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언론학자에 초점을 맞춘 그의 연구는 유학의 경험이 연구주체의 선택은 물론 연구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지식사대주의를 제기하는 한편, 미국 유학파와 국내 유학파, 국내 명문대와 지역 내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이 언론 등을 통해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을 파헤쳤다. 한국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에 내재된 ‘문화제국주의’와 이를 통한 부당한 ‘질서’에 대한 묵인도 자주 언급되는 영역이다.

한국이 제3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제사회의 권력질서와 무관하지 않다. 박지훈(2013)은 이러한 ‘관점’을 ‘다큐멘터리’와 제작자들의 인식을 통해 분석한다. 그는 MBC에서 방송한 <아프리카의 눈물>에 드러난 한국 제작자의 시선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재현하는 것으로 특정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다문화 담론이 궁극적으로 ‘포섭과 배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은 김영명(2013), 심훈(2013), 이소현(2014) 및 한희정(2016) 등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든, 의식적인 배려의 산물이든, 무의식적인 뉴스의 관행이든 이들 담론의 작용을 통해 한국사회는 이들을 열등국민으로 인식하고, 이민자들 또한 자신을 ‘2등 국민’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고 국내에서도 너무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에

서 관심권에서 멀어진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김동엽(2016)의 연구가 유일하다. 훈련의 범위나 목적 등을 분석한 경우는 일부 있지만, 훈련과 관련한 담론이 ‘분단질서’를 어떤 방식으로 고착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연구는 없었다.

### III. 자료수집과 연구방법

분석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카인즈(Kinds) 서비스를 활용했다. 국내 언론사의 정치적 지형을 고려해 진보, 중도와 보수를 대표하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를 선정했다. 또한 담론의 특성을 파악하는 목적에 맞도록 단순사실 보도가 아닌 ‘논리적 주장’을 담고 있는 사설, 칼럼 및 기획기사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았다. 정치적 상황에 따른 담론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 기간을 김영삼 정권(1993년 2월~1998년 2월), 김대중 정권(1998년 2월~2003년 2월), 노무현 정권(2003년 2월~2008년 2월), 이명박 정권(2008년 2월~2013년 2월) 및 박근혜 정권(2013년 2월~2017년 3월)으로 구분했다.

검색어로는 1961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독수리 연습’,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되었던 ‘팀스피리트’,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되었던 연합전시증원연습(RSOD),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키리졸브(Key Resolve)’, 그리고 ‘한미군사훈련’, ‘한미군사연습’을 포함한 총 7가지를 사용했다. 국내 언론은 주로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이 훈련을 소개하고 있었고 관련된 사설과 칼럼 등은 많지 않았다. 최종 분석된 샘플은 표 1과 같다.

연구방법은 모두 세 가지를 활용했다. 정치적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2차 자료 분석’을 활용했다. 현장답사나 참여관찰 또는 인터뷰, 내용분석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인터넷이나 SNS 등의 발달로 최근 자주 활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빅데이터, 통계 자료, 언론보도, 연구보고서, 논문 등이 있다. 다른 목적으로 생산된 자료를 2차

표 1 한미군사훈련 관련 사설 및 칼럼 최종 분석 샘플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합계
경향신문	7	1	1	4	1	14
동아일보	5	1	5	4	3	18
세계일보	4	2	3	3	2	14
한겨레	4	1	4	5	2	16
한국일보	3	1	3	3	3	13
합계	23	6	16	19	11	75

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불인 명칭으로 연구목적에 맞는 자료는 아니지만 가공이 편하고 또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언론이 유통하고 있는 담론의 양상을 분석하는 작업은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을 활용했다.

김영욱과 함승경은 비판적 담론 분석을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담론과 권력불평등 관계를 규명하고, 담론을 구조이면서 과정으로 정의하며, 담론 간의 갈등을 통해 사회적·역사적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정의한다(2014: 337). 페어클로우 또한 담론 연구의 대상은 텍스트로 표현된 담론 자체, 해당 담론을 중심으로 경쟁 또는 보완 관계에 있는 다른 담론 및 담론과 상호작용하는 제도와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Fairclough, 2003).

담론은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특정한 감정을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담론생산자가 원하는 행동이나 태도 또는 윤리적 판단을 하도록 돕는다. 비판적 담론 분석은 이런 특성에서 유래한 방법으로 특정한 담론이 등장하게 되는 정치적 맥락, 해당 담론의 주요 논리와 구성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정치적 맥락은 담론이 뿌리 내리고 있는 토양과 기후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성해, 2013). 국내 언론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담론의 양상을 분석하는 작업은 위에서 말한 텍스트 분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군사훈련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훈련을 해야 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핵심 주장이 무엇인가를 텍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다. 끝으로, 담론전략은 특정한 메시지를 각인함으로써(Encoding) 담론생산자가 원하는 방식의 이해(decoding)를 이끌어내는 데 동원된 질서를 찾는 일이

다. 연구진은 예비조사를 통해 크게 ‘일상화, 합리화, 합법화 및 탈논리화’ 등의 전략을 확인했다.

일상화 전략은 먼저 이 군사훈련을 ‘당연하고, 불가피하고, 또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도록 만드는 방식을 뜻한다. ‘합리화’는 훈련의 규모와 내용의 변화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훈련을 하게 되는 원인과 해결책은 모두 북한에 있다는 설득이 주로 포함되는데 ‘선의’와 ‘방어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합법화’는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현장과 대규모 훈련의 경우 서면 통보 등을 명시한 비엔나합의문 등을 의식한 발언이다. 국제법이나 규범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외교 문제를 피하려는 전략이다. 그 밖에 ‘탈논리’ 전략은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이성을 활용하는 냉정한 판단이 아닌 감성에 호소하는 것으로 ‘억지, 협박, 트집’과 같은 단어가 동원된다.

연구문제는 1) 한미군사훈련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이 무엇인지, 2) 정권별 및 언론사별로 담론의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3) 군사훈련에 대한 무관심과 당연시를 위해 언론이 동원한 ‘담론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등으로 설정했다.

## IV. 연구결과와 해석

### 1. 한미군사훈련의 정치적 맥락

본질은 숨기면서 대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명칭(Naming)’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 등은 미국이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고,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지만,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르노삼성자동차도 비슷한 경우다. 르노(Renault S.A)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으로 현재 8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의 지분은 20%에 불과하며 삼성은 실제 주인이 아니다. 그대신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익의 0.8%를 받는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국내 소비자들은 르노를 프랑스 회사가 아닌 삼성으로 인식한다. 이것이 인수 당시 르노가 삼성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건 이유다.<sup>3</sup> ‘한미군사훈련’을 제대로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북대서양방위조약기구(NATO)라는 조직이 있다. 미국과 유럽이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군사기구다. 총사령관은 항상 미국이 맡는다. 부사령관은 영국이, 중부유럽사령관은 독일 차지다. 2차대전 이후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자국 군대를 둘 수 없고 NATO에서 독일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제한적이다. 전통적으로 소련과 중국 및 북한을 포함하는 대륙세력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도 이와 흡사하다. 총사령관과 참모장은 미국이 맡고 부사령관과 부(副)참모장은 한국 몫이다. 연합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한다. 한국의 전시작전권과 한미군사훈련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외형적으로 동등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인은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전쟁과 같은 긴급 상황일지라도 한국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sup>4</sup> 공동훈련이긴 하지만 ‘지휘와 기획’은 미군이 담당하고 한국은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훈련의 성격이 지속적으로 변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표 2에 나오는 것처럼 이 훈련의 뿌리는 195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군의 규모는 육군 7개 사단, 해병대 1개 사단을 포함해 무려 36만 명에 달했다. 주한미군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병력의 감소를 대신한 것은 전술핵이었다. 미국은 1957년 정전협정 제2조 12(d)항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1958년 주한유엔군사령부는 핵미사일의 존재를 처음 인정했다.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 및 미정보함 푸에블로 호 납치사건 등이 발생했던 1968년 주한미군의 규모는 6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막대한 군비 지출을 줄여

<sup>3</sup> ‘삼성’의 후광효과는 관련 업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르노삼성 관계자 역시 “아직도 ‘삼성자동차’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삼성의 이름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EBN, 16/1/18).

<sup>4</sup>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대의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이라는 글은 연합사 내부의 권력관계를 보여준다(오마이뉴스, 14.10.27). 한반도 전쟁이 불과 1시간 전까지 치달았던 1994년 당시 연합사령관 게리 러 대장은 백악관의 북한 폭격 사실을 한국 대통령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한국군 장교의 반발에 대해 연합사의 커밍스 대령이 의자를 발로 걷어차면서 욕설을 퍼부은 얘기는 잘 알려져 있다.

표 2 한미군사훈련 연대기

특징	주요 사건
태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4~ 포커스렌즈 훈련(유엔사 주관)</li> <li>· 1968. 1. 을지훈련(한국 정부 차원의 훈련)</li> <li>· 1969. 3. 포커스 레티나 훈련</li> <li>· 1970. 2. 미국 닉슨독트린 발표(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대처)</li> <li>· 1970. 4. 박정희 대통령, '방위산업 육성' 구상 밝혀, 8월 '국방과학연구소' 출범</li> <li>· 1971. 프리덤 볼트 훈련 실시(주한미국 7사단 철수 대비용)</li> <li>· 1973~ 미국, 작전계획 5027 수립</li> <li>· 1976. 팀스피리트 &amp; 을지포커스렌즈 시작</li> <li>· 1978. 한미연합군사령부(Combined Forces Command, CFC) 창설 및 훈련 주도</li> </ul>
성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2. 2. 미국 레이건 대통령, 주한미군철수 계획 백지화 선언</li> <li>· 1983. 북한, 소련과 공동으로 대규모 해군훈련 실시(팀스피리트 훈련 맞대응 전략)</li> <li>· 1991. 12.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선언 채택</li> <li>· 1992. 1. 국방부,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발표(북한 IAEA 가입 후 핵사찰 수용)</li> <li>· 1993. 3. 팀스피리트 재개 및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li> <li>· 1994. 3. 국방부, 팀스피리트 훈련 조건부 중단 공표</li> <li>· 1994. 6. 미국 클린턴 대통령,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 승인(주한미군속 소개 시작)</li> <li>· 1994~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실시(팀스피리트 대체)</li> <li>· 1994. 10. 북미, 제네바협상 타결(북한 핵활동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지원 교환)</li> <li>· 1994. 12. 정부,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li> </ul>
조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1. 미국 부시 대통령, 연두회견을 통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li> <li>· 2002~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 독수리연습 연계훈련 실시</li> <li>· 2003. 3. 제2차 걸프전쟁(이라크) 발발</li> <li>· 2003. 8. 북핵 해결을 위한 제1차 6자회담 실시(중국 베이징)</li> <li>· 2003. 11. 미국, 해외주둔군재배치계획(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발표</li> <li>· 2006. 9. 한미 정상회담, 전작권 전환 합의</li> <li>· 2006. 10. 북한 제1차 핵실험 성공 발표</li> <li>· 2007. 2. 한미 국방장관회담, 전작권 전환 시기 2012년 4월로 결정</li> </ul>
성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 키리졸브(RSOI 대체) &amp;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실시</li> <li>· 2009. 3. 키리졸브 첫 훈련 실시(북한 개성공단 차단)</li> <li>· 2009. 4 &amp; 5. 북한 광명성 2호 미사일 발사 및 제2차 핵실험</li> <li>· 2010. 3. 천안함 침몰 사건 발발</li> <li>· 2010. 6. 한미 정상회담, 전작권 환수 2015년 12월로 연기</li> <li>· 2013. 2. 북한 제3차 핵실험 및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li> <li>· 2013. 3. 북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 발표(핵무기 증설 공식 선언)</li> <li>· 2014. 1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및 한미연합사 유지 발표</li> <li>· 2015. 3.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실시(연안상륙작전 포함)</li> <li>· 2016. 1 &amp; 2. 북한 수소폭탄 실험 및 광명성 4호 위성 발사</li> <li>· 2016. 3. 역대 최대 규모(해병대 북한핵심 시설 침투훈련 포함)</li> </ul>

야 했던 미국 닉슨 행정부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1969년의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 훈련은 한국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현지에 있는 정예부대 2,500명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훈련이었다. 1971년 진행된 ‘프리덤볼트(Freedom Bolt)’ 훈련 역시 155마일에 달하는 휴전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태동기에 해당하는 이 기간 동안 한미훈련의 주된 목적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단순 관리였다. 전두환 대통령(1980~1986)이 집권한 이후, 한국은 냉전의 전초기지로 격상했다. 이른바 ‘성장기’로 접어들었다.

팀스피리트(Team Spirit, TS) 훈련은 1976년 시작되었다. 1975년 8월에 체결된 ‘헬싱키선언’으로 유럽에서 더는 대규모 훈련을 못하게 된 미국이 찾아낸 최적지가 한국이었다. 당시 주동자는 2003년 이라크전쟁을 지휘했던 도널드 럼스펠드였다(강정구, 2005). 한미 양국은 1978년부터 이 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담당할 목적으로 한미연합사를 설립했다. 보통 2월 초에 시작해 4월 말에 마무리되는 이 훈련에는 양국의 육·해·공 수개 사단 병력이 참가하며 연합해상작전, 야전기동훈련, 연합상륙작전, 공수낙하훈련 및 각종 지원작전 훈련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양국관계는 소원했고 전면적인 훈련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안보 불안을 느낀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1973년 4월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지시에는 ‘한국의 작전지휘권 회수 대비, 고성능 전투기와 미사일을 제외한 무기 장비의 국산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반도 군비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는 당연했다. 인권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카터 행정부의 관점에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남발하는 것 또한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양국 간 갈등구도는 1979년 10.26 사태로 일단락된다.

미국은 연례적으로 인권보고서를 발표한다. 북한, 중국, 쿠바와 미얀마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국제사회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협력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다양성과 언론자유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Nye, 2003). 그러나 중동 국가 중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예멘과 쿠웨이트 등은 왕정국가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인권 탄압에 대한 철저한 침묵에서 보듯 인권이라는 잣대 역시 자의적

으로 적용된다. 1980년 한국의 광주 민주화도 예외가 아니었다.

1981년 1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전두환 장군을 초청했다. 레이건은 국방자주화 프로그램 폐지를 약속했고 1982년 국방과학연구소의 유도탄 개발팀을 해체했다. 한미 양국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처한다는 데에 합의했으며 이를 계기로 레이건-나카소네-전두환 협력체계가 가능했다. 안보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한 미국은 한국의 외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으로 하여금 40억 달러를 한국에 지원하게 했다. 한미훈련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태동기의 목표를 넘어 공산권(특히 소련)을 겨냥하게 된 것은 1983년 이후 두드러졌다. 당시 훈련에 참가한 병력은 20만 명을 넘었고 전략폭격기와 스텔스전투기도 동원되었다. 레이건 행정부의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캐스퍼 와인버그 국방장관이 중동에서 미국이 전쟁을 개시할 때 소련의 역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2개전선’ 전쟁 가능성을 제시한 것도 이때였다. 1983년 북한과 소련이 실시한 대규모 해상훈련은 이 훈련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냉전의 붕괴를 계기로 이 훈련은 마무리된다.

1980년대 후반 동구권의 붕괴와 중국 및 소련의 ‘달리화’ 결재 요구로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 내몰렸다(김진환, 2010). 1989년 소련은 일방적으로 북한과 맺었던 군사협정을 파기했고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미그(MIG)기 20여 대를 제공했다. 1991년 4월 12일에는 한국의 이종구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 북한은 더는 위협적인 대상이 아니었고 소련과 중국은 남한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급증하는 쌍둥이 적자를 외면할 수 없었던 미국 정부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군사훈련을 더는 유지할 상황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로 하여금 방위비분담금을 내도록 한 것도 이 시기였다.<sup>5</sup> 북한 또한 당면한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1991년 8월,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노태우 정부는 한반도에 더는 핵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1992년은 남북대

<sup>5</sup> 1991년 1,073억에 불과했던 분담금은 2014년 9,200억으로 증가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비용을 100%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은 현재 약 50%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해로 기록된다.

조정기는 이 시기 이후부터 이명박 정부가 키리졸브 훈련에 합의한 2008년 전까지를 말한다. 물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이 기간에도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핵사찰을 얻어내기 위해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했고 항공모함 인디펜던스 호도 파견했다. 북한은 곧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고 1994년 6월 한반도는 전쟁 직전까지 내몰렸다. 그해 10월 북미 간 제네바합의가 극적으로 체결되었고 북한은 중유를 비롯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얻고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시켰다. 1998년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폭파했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2000년에는 북한의 조명록 차수와 미국의 올브라이트 장관이 각각 워싱턴과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 등장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네바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2006년 10월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그 이후의 광명성 위성 발사 등은 이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군사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박정희 정권 때였다.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1990년대 초반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 역시 작전권을 재론하기 시작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1987년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이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4년 12월 한국 정부는 평시작전권을 회복했다. 미국 중심의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 등의 대륙세력 간 ‘균형자’ 역할을 추구하고 있던 노무현 정부에 접어들면서 이 문제는 급물살을 탔다. 200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1994년 전시증원연습훈련으로 대체되었다. 이 훈련은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파병된 증원부대와 전투 장비를 받아 전방 전투지역에 신속하게 배치하는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전이었다. 독수리연습(Foal Eagle)은 2002년부터 이 훈련과 연계해 실시되었으며 북한의 특수부대 등이 남한에

침투할 경우를 대비한 병력 동원이 핵심이었다. 팀스피리트 훈련과 비교했을 때 규모나 본질에 차이가 있었던 전시증원연습훈련이 진행되던 동안 북한의 반발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전략적 목표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지시로 미국은 ‘작전계획 5027-04’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북한의 침략을 단순히 격퇴하는 것을 넘어 ‘북한정권을 제거하고 북한의 주요 시설을 점령하는 것’을 포함했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2007년 실시된 전시증원연습훈련의 일부였던 ‘만리포 상륙작전’을 통해 드러났으며 북한의 해안에 상륙해 평양을 고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2017년 현재가 포함된 ‘성숙기’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다.

노무현 정권 막바지였던 2007년 한미 양국은 작전권 환수 날짜를 2012년 4월 12일로 잠정 합의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을 비롯해 2010년에 불거진 일련의 안보 불안은 이 일정이 1차적으로 조정된 계기였다. 2010년 6월 양국의 정상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 북한의 핵위협 증가 및 한국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지휘권을 되돌려받는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2008년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은 2013년부터 한국이 주도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2009년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에는 주한미군 1만 2천 명과 해외 주둔 미군 1만 4천 명 등이 참여했다. 제3함대 소속의 항공모함 USS 존 C 스테니스 호를 비롯해 주요 함정 10여 척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이었다. 한미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도 같이 진행되었고 2만 명 이상의 한국군이 참가했다. 2010년의 훈련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전담하는 미군 부대가 처음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 전시작전권을 2015년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3년 취임 직후의 한반도 상황은 결코 낙관하지 않았다.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재료 또한 플루토늄에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변경했다. 미국 CIA 등은 이를 근거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 북한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 4월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중반 이후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그해 10월 23일 한미연례안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2015년 3월에 시행된 훈련에서 작전을 총괄한 곳은 한미연합사로 한국이 지휘하기로 한 약속은 백지화된 상태다. 2010년 한미 양국은 서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벌였고 2012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훈련이 진행되었다. 양위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미 태평양함대의 군사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북한 역시 이 훈련이 시작된 이후부터 “한국과 미국의 훈련은 핵전쟁을 도발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2013년 북한은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16년에는 수소폭탄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연이어 진행했다. 방위를 목적으로 시작한 애초의 의도와 달리 한반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 2. 군사훈련을 둘러싼 언론 담론의 이해

### 1) 정권별 특징

군사훈련과 같은 현안은 언론이 접근하기 곤란한 영역이다. 정부와 군대가 정보를 장악하고 있을 뿐더러 애국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한계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전쟁이나 스포츠 관련 보도의 경우 언론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보다는 옹호하는 경향이 많다. 랜스 베넷(Lance Bennett)이 제시한 인덱싱 가설(Indexing Hypothesis)은 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엘리트 간 합의 강도에 따라 언론의 비판 정도가 달라진다는 관찰이다. 권위 있는 정보원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언론의 속성 때문에 이들이 분열되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분단국가라는 슬픈 운명을 가진 한국은 다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살아있는 권력이다. ‘종북(從北)’이나 ‘반미(反美)’라는 낙인이 찍히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 정치인을 비롯해 지식인과 엘리트 전반에 일종의 자기검열이 만연하다. 군사훈련을 둘러싼 환경은 변했다. 훈련의 내용과 목표도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진화했다. 과연 이 기간 동안 담론도 진화했을까? 각 시기별 담론의 변화를 살펴본 것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 팀스피리트 훈련은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훈련”(경향신문, 1993.11.5),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다지는 정상적인 군사

연습”(동아일보, 1993.11.2) 및 “공개적이고 연례적인 방어연습”(세계일보, 1993.9.8) 등으로 규정된다. 무려 20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러한 성격 규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령, 『세계일보』는 “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훈련” 또는 “무모한 ‘북의 도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뒷받침하는 훈련” 등으로 지칭한다(2013.5.8). 『동아일보』와 『경향신문』도 각각 “방어작전 위주로 진행되는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2013.3.7) 및 “북한의 위협을 앞에 둔 우리에게 중요한 안보자산”(2013.5.2) 등으로 정의한다.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었던 ‘조정기’에도 두드러진 차이는 없다. 다음에 나오는 『세계일보』의 주장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군사훈련은 군사훈련일 뿐이다. 정부는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납득하기 힘들다. 군사훈련 차질과 함께 군의 안보관마저 헤이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의 조치는 남북 정상회담을 이유로 한미 간 UFL 훈련 중단을 요구해온 북한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측면이 있기에 비판의 여지가 있다. (2007.8.15)

물론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서는 일부 변화가 있다. 예컨대, 『한겨레신문』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의 평화군축팀 부장의 칼럼을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대북 공격 예행연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 … 이번 훈련은 한미 연합사가 밝히듯 ‘방어에 중심을 둔 예방 훈련’이 아니며, 미군의 정밀타격 능력을 앞세워 북한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어디에나 신속하게 작전에 투입하기 위한 공격적인 기동훈련이다”와 같은 내용을 전한다(2005.3.24). 『경향신문』 또한 북한의 <평양방송>을 인용하면서 “부시 집권팀은 처음부터 선임자들의 대조선 궤도에서 완전히 탈선해 우리(북한)에게 극히 도전적으로 나왔다. 우리를 불량배 국가, 테러지원국으로 몰아붙였다. 부시 행정부의 대조선 강경정책의 본질은 조미관계를 냉각시켜 침예한 대결로 이끌어가며 힘으로 공화국을 압살하는 것이다”는 기사를 게재했다(2001.5.2). 그러나 국내의 불평등한 언론 지형을 감안할 때 이런 관점은 제대로 공유되지 못했다. 정권별 ‘원인과 대응책’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김영삼 정부 당시 국내 언론이 언급한 원인으로서는 “북한의 핵 의혹, 북의 모든 가능한 도발과 오판, 체제 붕괴”(경향신문, 1993.11.5), “남한의 발언권을 무시해

버리겠다는 협상전략을 세워놓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협상상대를 지치게 하는 협상기법”(동아일보, 1994.3.4) 또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심각성, 북한의 도발 가능성”(세계일보, 1996.11.4) 등이 있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유사했다. 한 예로 『동아일보』는 훈련을 진행해야 하는 원인으로 “정부가 만에 하나 북의 요구에 밀려 훈련 계획을 변경한다면 군사동맹을 해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관점을 유지했다(2007.8.11). 『세계일보』에서도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UFL 연습”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즉 완전한 핵 폐기)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07.8.11).

‘모든 게 북한 탓’으로 요약되는 해결책 역시 이런 경향이 지배적인데 『동아일보』의 다음 주장에서 확인된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의 북한을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 50년 가까운 분단기간에 우리는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을 통해 익혔다. …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를 거부하는 가운데 지금 세계적인 고립 속에서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다. 그 몸부림이 핵문제를 통해 표출된 것이다. (1994.3.25)

원칙에 따라 맺고 끊음을 분명히 해야 할 텐데도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모양새이니 주권국가로서의 체통은 뒷전이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가. 오히려 북은 이런 우리를 얹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뿐이다. … 북이 정상회담을 핑계로 우리의 대북(對北)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남남(南南) 갈등을 촉발하는 책동을 일삼더라도 굳은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 (2007.8.23)

북한은 전혀 터무니없지만 한미가 핵을 빌미로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애당초 북한이 핵개발에 나서지 않았다면 이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유엔의 제재 때문에 한국 정부가 설령 과거처럼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014.8.13)

그러나 보수진영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한미군사훈련은 북한의 ‘핵개발’과 무

관하게 시작했다. 북한을 겨냥하지 않고 소련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단순한 방어용을 넘어 국제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선제 공격도 포함한다. 리영희는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적·객관적 관점과 남북 어느 쪽에도 편들지 않는 독립(중립)적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 간의 행위는 거의 예외 없이 서로 원인을 주고받는 인과관계와 상호작용의 연쇄적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남북한 어느 한 쪽은 전적으로 결백하고 다른 쪽은 전적으로 위법자라는 식의 간편하고도 행복한 도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리영희, 1999: 2).

## 2) 이념 진영별 특징

국내 언론의 정파성은 악명이 높다.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북한이나 미국과 관련한 이슈의 경우 이런 경향은 더 뚜렷하다. 언론을 비롯해 학계와 정치인 등이 망라한 진보와 보수 진영은 상반된 주제에 집중하거나 동일한 주제에 정반대의 해석을 한다. 위에서 정권별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 역시 이런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른 언론사별 담론경쟁은 다음에 나오는 분석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미군사훈련을 둘러싼 담론은 복합적이다. 반복 담론과 친미담론이 혼재해 있고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다. 언론사별 지형을 구분하면 가장 왼쪽에 『한겨레신문』이 있다면 『세계일보』와 『동아일보』는 그 대척점에 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경향신문』은 진보진영으로 구분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취한다.

1993년 한반도 정세는 안개 속이었다. 1992년 한 해 중지되었던 연합훈련을 재개했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1994년 10월 제네바협약이 타결되기 전에는 전쟁 직전까지 내몰렸다. 언론사들 또한 왜 훈련을 해야 하며, 북한의 책임이 어디까지고 또 적절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각자의 주장을 쏟아낸 시기였다. 같은 진영 내에서도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었고, 진영은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 예로, 『경향신문』은 “북은 권영해 국방장관의 발언을 트집삼아 남북접촉마저 거부하는 자세로 돌변했다. 하지만 그 숨은 의도는 국제적 고립과 수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투적 전략이 것

들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1993.11.5). 그러나 거의 비슷한 시기 『한겨레신문』은 “결핍하면 경제제재다 군사제재다 하는 소리가 무성하나,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와 한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볼모로 하는 작태들이다.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제재나 군사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누누이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영이 달랐던 언론사들이 유사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예컨대 『세계일보』는 “북한은 지금까지 협상을 위협한 한계까지 몰고가는 모험정책으로 몇 번은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을 되풀이하다가 끝내는 건잡을 수 없는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1993.9.8). 『한국일보』의 입장도 “북측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의 도박을 해야 했던 진짜 속셈은 판 데 있다. 체제위기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모면해 보자는 「이판사판」의 의식이다. 남북합의서 채택 그리고 미국·일본과의 수교회담 등 저들이 보여온 대외용 미소전술은 이제 체제위기 의식에 압도된 꼴이 됐다”로 표현하고 있다(1993.3.14).

국내 엘리트 간 불협화음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언론의 정파성이 다소 약화되기도 했다. 가령, 『동아일보』는 남북 화해 및 협력이 한계가 있었던 이유로 “재래식 군사력의 대립과 긴장”을 지적하면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2002.3.4). 북한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세계일보』도 장충식 한국적십자사 총재의 부적절한 발언이 “북한의 자존심과 체면”을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우리 측 남북관계 당사자들도 북한이 어렵게 개방의 길을 선택한 이상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감싸 안는 자세를 견지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2000.11.6). 그러나 전시작전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진영별 대립구도는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다음의 인용에서 보듯 2006년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 진보진영의 언론의 기사를 보면 가능한 북한을 이해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다.

모든 위기는 잘만 대응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장관급 회담을 연기시키지 않았다면 남측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됐을 것이다. 한·미 간에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도 고위급 남북대화가 열린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를 실감할

게 틀림없다. 북한이 역발상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경향신문, 2006.3.13)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남북관계가 영향 받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남쪽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 자신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남쪽은 대화를 피해선 안 된다. 만나서 따질 건 따지고 들을 건 들어야 한다. (한겨레신문, 2006.7.8)

보수진영에 속하는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이와 달리 노무현 정부의 유화적 접근을 문제 삼는 보도로 일관했다. 그 예로, 『동아일보』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기저를 흔든 셈이니 후(後)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정말 걱정이다. 미국의 입장에선 대북 압박을 중단하라는 신호로 읽힐 것이 분명하다. 노 대통령은 과연 한미동맹이 유지되기를 바라거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2006.5.11). 『세계일보』 또한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과 전시증원연습훈련의 연기가 추진되다가 예정대로 실시키로 했다는 소식은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비록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없던 일로 됐지만, 연례행사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조차 ‘북한 측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북 눈치 보기에 휘둘러 연기까지 추진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생각할 때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2006.1.12).

한미군사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결정적인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상징적 사안이다. 진영별 갈등은 ‘조정기’를 거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북한의 핵개발, 중국의 급성장 및 미국의 대외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국내 언론의 정파성에 대한 우려는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의 정파성 세미나’(2009)와 『한국 사회의 소통위기』(2011)와 같은 저술 작업으로 이어졌다. 다음의 인용문은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한국 언론의 관점 차이를 잘 보여준다.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여야나 이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군과 정부, 정치권, 국민이 똘똘 뭉쳐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정희) 대표는 마치 딴 나라 사람처럼 북한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정당하게 대응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만 문제 삼고 있다. 마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위기를 촉발시

키고 있다는 투다. 중북(從北)이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동아일보, 2013. 3.8)

남북이 모두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현 상황을 바꾸려면 비상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한시적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하는 것이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북한이 도저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핵 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면, 한·미 역시 최대의 안보자산을 축소 또는 유예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가장 못한 지도자가 국민을 전쟁 위기 속에 살게 한다. (경향신문, 2013.5.2)

### 3. 언론의 담론전략

담론이 온전한 형태를 띠는 것은 건축물이 완공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담론전략은 빌딩이나 집을 지을 때 온갖 종류의 자재를 일정한 질서에 따라 조합하는 과정과 흡사하다. 군사훈련의 경우 이는 크게 일상화, 합리화, 합법화 및 탈논리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에서 ‘일상화’ 전략은 ‘담론의 힘, 진실효과, 담론권력’ 등과 관련이 있다. ‘당연하게 수용함으로써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언론에서 한미훈련은 정권이 변하든 진영이 다르든 예외 없이 ‘방어적인 연례훈련’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훈련이고 정치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는 견해다. 이 훈련은 정권이 바뀌거나 훈련의 본질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1990년대 일상화 전략은 “팀스피리트 훈련은 어디까지나 방어 목적의 기동연습으로 ... 순수한 군사훈련이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데 대해 그 불만도 만만치 않다”(경향신문, 1994.10.5) 또는 “팀스피리트 훈련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핵전쟁 연습이 결코 아니며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다지는 정상적인 군사연습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등으로 나타난다(동아일보, 1993.11.2). 전시증원연습훈련으로 전환된 이후에 해당하는 2000년대 중반에도 이 전략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바뀌지 않았다.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북측의 민감한 반응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

만 RSOI 훈련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으로 매년 북한에 일정이 통보되고 있으며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는 점이 누누이 강조돼 왔다. 그럼에도 북한은 매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 2006.3.18)

후방지역 안전 및 안정 작전·상륙 작전 등 실전적인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은 1961년부터 해마다 실시돼 왔으며, RSOI 또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으로, 우리의 방위능력을 점검하는 필수적 연례 군사훈련이다. (세계일보, 2006.1.12)

한미연합사령관과 한국의 국방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주요 거점 점령 등을 밝힌 이후에도 관점은 동일하다. 한 예로, 『세계일보』는 “미국은 극심한 예산삭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10억 달러라는 거액의 예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 서부 해안 미사일방어망(MD)에 요격미사일 1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며 “한·미 동맹은 두 나라의 미래를 열어나갈 비전의 중심축”이라고 주장한다(2013.3.20). 중도로 분류되는 『한국일보』에서도 “키리졸브 연습은 1994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방어 위주의 지휘부 모의 군사 훈련으로 새로운 훈련이 아니다”고 주장한 전직 안전기획부 북한조사실 단장이었던 고려대 송봉선 겸임교수의 칼럼을 실었다(2013.4.11). 담론전략의 또 다른 차원으로는 ‘합리화’가 있다. “훈련이 왜 필요하며, 불편을 감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득 작업이다. 다음에 나오는 인용은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반복되는 『세계일보』의 관련 주장이다.

70년대 중반부터 실시됐은 한미합동훈련 팀스피리트는 세상이 다 아는 공개적이고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다. … 이를 북한에 대한 「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1993.9.8)

남북 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적인 한미 군사훈련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은 어디까지나 북핵 폐기가 전제돼야 한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확실한 핵 폐기 약속이 있어야 한다. (2007.8.11)

25일부터 동해상에서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방어적 군사훈련이다. ... 한미 양국이 이처럼 대규모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천안함 사태를 유야 무야 넘기지 않겠다는 양국의 결연한 의지 때문이다. (2010.7.27)

국내 언론의 보도가 단순한 현실 반영이 아닌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지 않은 ‘담론’이라는 근거는 ‘합법화’ 전략에서 두드러진다. 국제적으로 한미훈련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유엔현장과 비엔나합의문이 있다. UN 제2조 4항은 앞에서 소개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는 비엔나합의문은 1986년 9월 19일 스톡홀름 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4만 명이 넘는 군사훈련은 1년 전, 75,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전에 의무적으로 통고할 것”, “17,000명이 넘는 군사훈련의 경우 이해당사자를 반드시 초청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나오는 주장은 이런 쟁점을 정확하게 알고 ‘의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70년대 중반부터 실시됐던 한미합동훈련 팀스피리트는 세상이 다 아는 공개적이고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다. 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이 연습계획이 군사정전위원단에 통보됐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정전위원단 요원들에게 참관을 위해 초청되고 있다. 이를 북한에 대한 「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세계일보, 1993.9.8)

우리와 미국은 유사시 미군 증강과 가상 적 후방 강습상륙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해·공·지상군 합동연습을 ‘방어훈련’으로 못 박고 있다. 훈련계획도 미리 북한에 통보한다. 그러나 북한은 1970~80년대 ‘팀스피리트 연습’ 때부터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상륙훈련에 공포심을 내보였다. 즐기차게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미국이 94년 이를 수용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국일보, 2009.2.20)

합법화로 볼 수 있는 주장은 진보 진영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 예로 『경향신문』은 “한국은 팀훈련이 북침준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중립국 참관단을 초청하기도 했다. 북한대표에도 직접참관을 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4.4.4). 『한겨레신문』 또한 “21일까지 계속되는 키리졸브 연습에 대한 북한의

이런 반응은 대단히 지나친 것이다. 이번 연습은 연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으로, 이미 지난달 21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 통보됐다. 그럼에도 이를 빌미로 정 전협정 백지화 등을 위협한 것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히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2013.3.11). 물론 『한겨레신문』은 이 문제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오혜란 사무처장이 쓴 칼럼을 통해서 한 번 제기한 적이 있다.

국제사회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언어폭력’은 악명이 높다. 국가지도자에 대한 망언도 서슴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을 자극함으로써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전략으로는 ‘탈논리화’가 있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이 전략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지난달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고 북의 통미봉남과 한미 이간 술책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제 북은 남은 ‘깡패 수법’을 버려야 한다. 민항기 안전 위협은 명백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국제 제재만 초래할 뿐이다. (동아일보, 2009.3.7)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국방위나 외교부를 통해 격한 어조로 반발하고 있다. 핵 억제력을 통한 보복성전을 감행하겠다는 엮포도 서슴지 않고 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불행한 일이다. (세계일보, 2010.7.27)

실제로 북한은 매년 한미 연합훈련 때마다 ‘불벼락’이니 ‘섬멸적 타격’이니 하면서 갖은 협박과 엮포를 계속했지만 군사적 도발은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선 북한의 협박과 엮포를 ‘꽤 많은 개가 짖는 소리’ 정도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동아일보, 2011.2.19) 밑줄은 필자 표시

국내 언론이 취하고 있는 이 전략은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된다. 한 예로, 김영욱과 김택환은 국내 언론이 북한을 보도하는 방식은 “북한 실상에 대한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경향, 지역적 사안에 대한 가십성 보도, 오보, 추측보도, 왜곡보도, 미확인보도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정확한 보도”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김영욱·김백환, 2000). 입을출 또한 “정작 문제는 우리 언론의 북에 대한 왜곡된 혹은 잘못된 보도가 북의 반발을 초래하고, 이 반발이 우리 사회 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불신을 뿌리 깊게 만들어 정작 북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도 호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한다(입을출, 2014: 96). 이러한 지적은 국내 언론이 의식하든 하지 않든 특정한 방식의 담론전략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조적인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 V. 요약과 함의

한반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단하다.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있지만 날마다 머리 위로 전투기가 날아다닌다는 것은 악몽이다.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은 말할 것도 없고 천문학적 규모로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 현실도 안타깝다. 2017년 대선에서 반복된 ‘중북 논란과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논란’ 역시 낯설지 않다. 이 모든 모순의 핵심에는 분단이 있다. 정상적인 생명체가 허리가 잘린 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분단의 고착화에서 비롯된 일상적인 안보위기와 관련이 있다. 2016년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 386조 7천억 원 중 약 39조 원이다. 2015년에 비해 사회간접자본 비중은 6% 줄었지만 국방비는 4% 증가했다. 생활은 어려워지는데 안전보장비는 더 늘어난 셈이다.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긴 상태에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도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병자호란 당시의 악몽이 반복될까 두려운 시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 수준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미군사훈련이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도 감히 추측할 수 없다. 북한이라는 사악한 집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미국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안보, 경제와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국은 여전히 가상의 적에 가깝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행여 이 인식이 권력관계의 부산물은 아닐까?라는 물음이 이 연구가 제기한 문제의식이다.

담론은 정치적 목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담론은 구조를 정당화하고 문제를 은폐하며 궁극적으로 기존 질서에 필요한 능동적 협력을 이끌어낸다. 연구진은 이를 감안해 담론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을 먼저 살폈다. 2017년 현재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이해관계 지형은 어디일까?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195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일까? 질문은 복잡했지만 이를 풀어가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했다. 한미군사훈련을 둘러싼 주변 정세를 분석하는 것, 이것이 이 연구가 택한 방법이다. 양국의 군사훈련이 언제 시작해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 그리고 경제 등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을까를 질문하고 답을 찾았다. 한미군사훈련이 애초의 방어목적에서 점차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점, 외형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지만 실상은 소련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2009년 이후의 키리졸브 훈련은 전 지구적 ‘패권전략’의 하나로 진행된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언론보도를 통한 담론분석 작업은 왜 한국사회는 ‘불평도 하지 않고, 비판도 없이, 한미군사훈련을 너무도 당연하고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국내 주요 5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이 훈련을 다룬 사실과 칼럼, 기획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연구를 통해 분단국가의 특성, 정파적 언론 상황 및 지식사대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엘리트 간 합의 정도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달라지는 미국 등과 달리 국내 언론에는 이 훈련을 대하는 ‘지배적이고 견고한’ 선입관이 존재했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물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은 간헐적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음에도 ‘훈련에 대한 규정, 원인과 해결책’ 등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인식과 ‘모든 것이 북한 탓’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정치적 목적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 ‘담론전략’을 분석했다. 담론이 갖는 권력효과와 기존 연구의 통찰 및 연구자의 과거 연구 등을 통해 ‘일상화, 합리화, 합법화 및 탈논리화’ 등의 전략을 설정했다. 언론의 주요 내용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인용했고, 이를 통

해 ‘증명’할 수는 없지만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반세기 이상 ‘방어적이고 합법적’인 훈련이라는 구호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의적으로 편집된 정보와 논리적인 해석 열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답은 찾은 것으로 평가한다.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은 이 연구의 성과다. 그러나 기존의 논리가 신화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 진실의 일부를 담보하고 있는가는 분석하지 못했다. 한미동맹의 성과와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 자체만을 두고 평가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의 공식담론, 국방부의 보도자료 및 각종 연구소의 보고서 등을 함께 분석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주류 언론의 보도만을 대상으로 담론의 대표성을 주장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공개하지 못하는 정보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과 다른 실체가 있을 경우 신화를 해체한다는 연구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한미군사훈련의 실체와 담론 자체가 갖는 복잡한 상호작용 역시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훈련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해집단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왜 언론을 통해 담론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담론을 분석하면서 중요한 발화자를 함께 살펴보지 않은 점 역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부분이다. 그 밖에 담론분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분석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의미연결망 분석 등을 통해 담론의 구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투고일: 2017년 5월 4일 | 심사일: 2017년 6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7년 7월 3일

## 참고문헌

- 강명구. 1994. “경제뉴스에 나타난 경제위기의 현실구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사회』 3, 92-131.
- 강정구. 2004. “이라크전쟁과 파병: 미국의 야만성과 한국의 자발적 노예주의.” 『경제와 사회』 63, 281-310.
- 강정구. 2005. “안보 불안론의 북한주도의 허상과 미국주도의 실상.” 『진보평론』 23, 228-251.
- 김낙중. 2006. “적대적 군비증강, 군사훈련 중단 없는 남북교류는 헛짓.” 『민족21』 67, 16-23.
- 김동엽. 2016.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인식: 공포와 엄포 사이.” 『현대북한연구』 19(2), 83-112.
- 김상봉. 2004. 『학벌사회: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한길사.
- 김성해. 2008. “국제통화질서와 이지적 리더십: 미디어담론 분석을 통해서 본 달러체계모니의 이해.” 『한국언론학보』 52(3), 5-17.
- 김성해. 2013. “동아시아 공동체와 담론전쟁: 한국 언론의 동북공정과 독도분쟁 재구성.” 『언론과사회』 21(3), 64-106.
- 김성해. 2016. “퇴행성 국가의 해바라기 지식인: 언론학자를 통해서 본 지식패권의 문제점과 극복을 위한 제안.” 『의정연구』 47, 164-197.
- 김성해 · 강희민 · 이진희. 2007. “한국의 구조적 전환과 미디어담론: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주주중심 모델의 수용을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15(4), 39-85.
- 김성해 · 이동우. 2009. 『세계는 울퉁불퉁하다』. 민음사.
- 김영명. 2013. “한국의 다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1), 141-174.
- 김영욱 · 김택환. 2000. 『남북문제 보도의 새로운 모색: 독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함께』. 한국언론재단.
- 김영욱 · 함승경. 2014. “금연과 흡연의 담론 경쟁: 비판적 담론 분석(CDA)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58(5), 333-361.
- 김예란. 2005. “성매매 특별법의 보호와 처벌 담론: 육체와 권력의 관점에서.” 『언론과사회』 13(4), 146-181.
- 김종영. 2015. 『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 돌베개.
- 김진환. 2010. 『북한 위기론: 신화와 냉소를 넘어서』. 선인.

- 리영희. 1991. “한반도의 핵 위험 구조: 해부와 대안.” 『창작과비평』 73, 279-301.
- 리영희. 1999. 『반세기의 신화: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 삼인.
- 박기학. 2015. “누구를 위한 한미일 동맹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60, 72-94.
- 박지훈. 2013. “제3세계에 대한 한국 다큐멘터리의 시선: 제작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 45-84.
- 백낙청. 2006. “한반도의 시민참여형 통일과 전지구적 한민족 네트워크.” 『역사비평』 77, 26-43.
- 백미숙. 2015. “1960~1970년대 주부 교양프로그램과 텔레비전의 젠더 정치: 주부화, 탈 주부화, 재가정화의 가족 이데올로기.” 『언론과사회』 23(4), 120-185.
- 신진욱. 2011. “비판적 담론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사회』 89, 10-45.
- 심훈. 2013. “다문화 휴먼 다큐멘터리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 KBS 〈인간극장〉에 등장하는 결혼 이주민의 언술 행위 중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7(4), 131-167.
- 양정혜·이현주. 2005. “텔레비전 뉴스와 젠더 질서: 성매매방지법 보도의 프레이밍 분석.” 『한국방송학보』 19(2), 378-418.
- 유영구. 2013. “[기고\_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군산복합체] 한미동맹 내세우며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열중 한반도비핵화 협상은 뒷전.” 『민족21』 151, 74-83.
- 윤태일. 2004. “여성의 날씬한 몸에 관한 미디어 담론분석.” 『한국언론학보』 48(4), 5-30.
- 이삼성. 1996.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당대총서.
- 이삼성. 2004. “동아시아의 20세기와 미국, 그리고 한국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4(1), 5-47.
- 이소현. 2014. “TV 속의 다문화가정 2세: 이산적 정체성의 포섭과 배제.” 『미디어, 젠더&문화』 29, 5-36.
- 임기홍. 2016. 『위기의 남북관계』, 역사인.
- 임동원. 2008.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5년』, 창비.
- 임을출. 2014. “북한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관훈저널』 130, 94-100.
- 장산. 2007. “공법: 국제법상 무력행사금지의 원칙과 자위권.” 『법학논총』 24(2), 173-196.
- 정연호. 2008. “한미 동맹의 형성 및 변화 결정요인 분석과 향후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4, 1-82.
- 정옥신. 2015. “방위산업 비리, 깃털이 아닌 몸통을 봐야한다.” 『황해문화』 86, 196-206.
- 정태욱. 2008.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적법성.” 『법학연구』 11(1), 93-111.
- 한희정. 2002. “한국 여성 잡지의 모성담론 분석: 〈여성중앙〉 〈여성동아〉 〈우먼센스〉

- 〈주부생활〉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1), 231-273.
- 한희정. 2016. “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 다음사이트 ‘아고라’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5, 43-79.
- 홍성구. 2004. “코포라티즘적 계급정치와 언론보도: 정리해고제의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 을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12(4), 3-33.
- 경향신문. 1993. “북핵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 『경향신문』(11월 5일).
- 경향신문. 1994. “안보공조 빈틈없나.” 『경향신문』(10월 5일).
- 경향신문. 1994. “팀훈련, 흥정거리 아니다.” 『경향신문』(4월 4일).
- 경향신문. 2006. “아쉬운 남북 장관급 회담 연기 통보.” 『경향신문』(3월 13일).
- 경향신문. 2013. “올해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남긴 것.” 『경향신문』(5월 2일).
- 권기숙. 2013. “든든한 보훈이 국가안보의 초석.” 『세계일보』(3월 20일).
- 김중대. 2014. “김영삼과 이명박의 거짓말… 어쩔 이렇게 닳았나.” 『오마이뉴스』(10월 27 일).
- 동아일보. 1993. “한미안보협력 강화해야.” 『동아일보』(11월 2일).
- 동아일보. 1994. “아직도 경계의 상대.” 『동아일보』(3월 25일).
- 동아일보. 1994. “어처구니 없는 북한.” 『동아일보』(3월 4일).
- 동아일보. 2006. “국민은 남북 정상회담 뒷돈 대는 ‘봉’ 아니다.” 『동아일보』(5월 11일).
- 동아일보. 2007. ““을지연습 중지” 北 요구에 흔들리지 말아야.” 『동아일보』(8월 11일).
- 동아일보. 2007. “北의 전방위적 軍 흔들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동아일보』(8월 23일).
- 동아일보. 2009. ““민족끼리” 외치다 民航機 위협까지 하는 北.” 『동아일보』(3월 7일).
- 동아일보. 2013. “통진당, ‘한미 연합훈련은 북침작전’ 이라니.” 『동아일보』(3월 8일).
- 동아일보. 2013. “核 들고 우쭐대는 北, 식물정부가 제압할 수 있다.” 『동아일보』(3월 7일).
- 동아일보. 2014. “세계가 주목할 때 北은 화해 협력의 길로 돌아서야.” 『동아일보』(8월 13 일).
- 세계일보. 1993. “답답한 남북대화의 전망.” 『세계일보』(9월 8일).
- 세계일보. 1996. “강력한 대북응징 의지.” 『세계일보』(11월 4일).
- 세계일보. 2000. ““이산상봉” 차질 없어야 한다.” 『세계일보』(11월 6일).
- 세계일보. 2006. “한·미 연합훈련까지 북한 눈치보는 현실.” 『세계일보』(1월 12일).
- 세계일보. 2007. “남북 정상회담 협상 당당해야.” 『세계일보』(8월 15일).
- 세계일보. 2007. “정상회담, 투명한 대북지원과 안보 보장돼야.” 『세계일보』(8월 11일).
- 세계일보. 2013. “韓·美의 ‘더 깊고 더 넓은 동맹’ 선언.” 『세계일보』(5월 8일).
- 송봉선. 2013. “도를 넘은 북한의 대남언어폭력.” 『한국일보』(4월 11일).

- 오혜란. 2007. “한-미 연합훈련 비용 덩터기 그만.” 『한겨레신문』(10월 19일).
- 유호열. 2010. “한미연합훈련과 천안함 사태 해법.” 『세계일보』(7월 27일).
- 윤상호. 2011. “北도발 ‘설마’에 당해놓고 또 ‘설마?’” 『동아일보』(2월 19일).
- 이경아. 2005. “왜냐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해야.” 『한겨레신문』(3월 24일).
- 정구철. 2002. “[리영희 교수 특별대담] 남북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기자협회보』(7월 18일).
- 최다현. 2016. “르노삼성, ‘삼성’ 떼면 주저 않는다?... ‘SM6=국산차’ 위장?” 『EBN』(1월 18일).
- 최재영. 2001. “北 美새정부 출범 100일 평가: ‘힘 맹신 부시는 외교 낙제생’.” 『경향신문』(5월 2일).
- 한겨레신문. 1993. “북-미 접촉과 우리의 기대.” 『한겨레신문』(10월 23일).
- 한겨레신문. 2006. “‘이중플레이’ 따지기 위해서도 대화는 필요하다.” 『한겨레신문』(7월 8일).
- 한겨레신문. 2013. “무력충돌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다.” 『한겨레신문』(3월 11일).
- 한국일보. 1993. “북의 체제위기 똑바로 보자.” 『한국일보』(3월 14일).
- 한국일보. 2006. “남북관계 일정 여전히 북한 멋대로.” 『한국일보』(3월 18일).
- 한국일보. 2009. “한미 군사훈련하며 헤아려야 할 것.” 『한국일보』(2월 20일).
- 한용섭. 2002. “北 ‘군사 신뢰구축’ 응하라.” 『동아일보』(3월 4일).
- Fairclough, N. 2004. *Analyz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London: Routledge.
- Nye, Joseph. 2003.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Why the World's Only Superpower Can't Go It Alon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Abstract**

## North Korea, the Public Enemy, Should Be Destroyed! Dissolving Conventional Wisdom Related to the US-Korea Joint Military Drills

Sung Hae Kim Daegu University  
Min Kyeong Kim Daegu University

---

The Korean society spends a huge amount of resources in staging the U.S-Korea joint military drills annually. Not only the conservative bu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liberal population takes the drills for granted in the face of the North Korean threat. This paper sheds light on this kind of conventional wisdom by dissecting related discourses. For the benefit of the doubt, first of all,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political contexts interwoven with the military drills. The identify of such factors, and the causes and the possible solutions will be the following discussion. Finally, this paper strives to unearth those discursive strategies including justification, normalization, legalization and sensationalization that help to nurture nation-wide indifference possibly leading to ignorance.

**Keywords** | hegemony, discourse, international order, military drills, conventional wisdom

